 금융위원회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b>보도</b>	<b>2018.1.29.(월) 조간부터</b>	<b>배포</b>	<b>2018.1.26.(금)</b>	
<b>책 임 자</b>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02-2100-2830)	<b>담 당 자</b>	이인욱 서기관(02-2100-2831) 나혜영 사무관(02-2100-2832) 김경호 사무관(02-2100-2824)		

## 제 목 :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 혁신서비스 촉진을 위한 **핀테크 로드맵** 및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마련(2월)
-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 특화금융사\* 출현 등 **금융산업 경쟁** 촉진  
\* 단순소액보험 전문회사(펫보험·어린이보험), 특화신탁회사(유연대용신탁, PET신탁)
- ◇ **청년·대학생 햇살론(600억원) 추가공급(1분기)** 등 청년층 지원 강화
- ◇ **병사전용 금융상품** 도입(2분기) → **학자금·취업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  
\* 시중은행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한도 확대(예: 20만원→40만원)  
→ 21개월 군 복무중 매월 40만원 저축시 제대하면서 최대 약 873만원 수령 가능
- ◇ **은행 ATM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3월)  
\* 예 : (현행) 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 (확대) 다문화가정, 정책서민상품 이용자 등
- ◇ **숨은 보험금(7.4조원)** 등 **약 8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 찾아주기
- ◇ **점수제 도입, 다양한 비금융정보 활용** 등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 ◇ 보다 큰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3월)
- ◇ 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2분기)
- ◇ **저축은행, 여전사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하반기)
- ◇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 확대(은행 45%→47.5%, 보험 30%→35%)**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안 등 「2018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음

※ 1.24일(수) 오전 9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합동 정부 업무보고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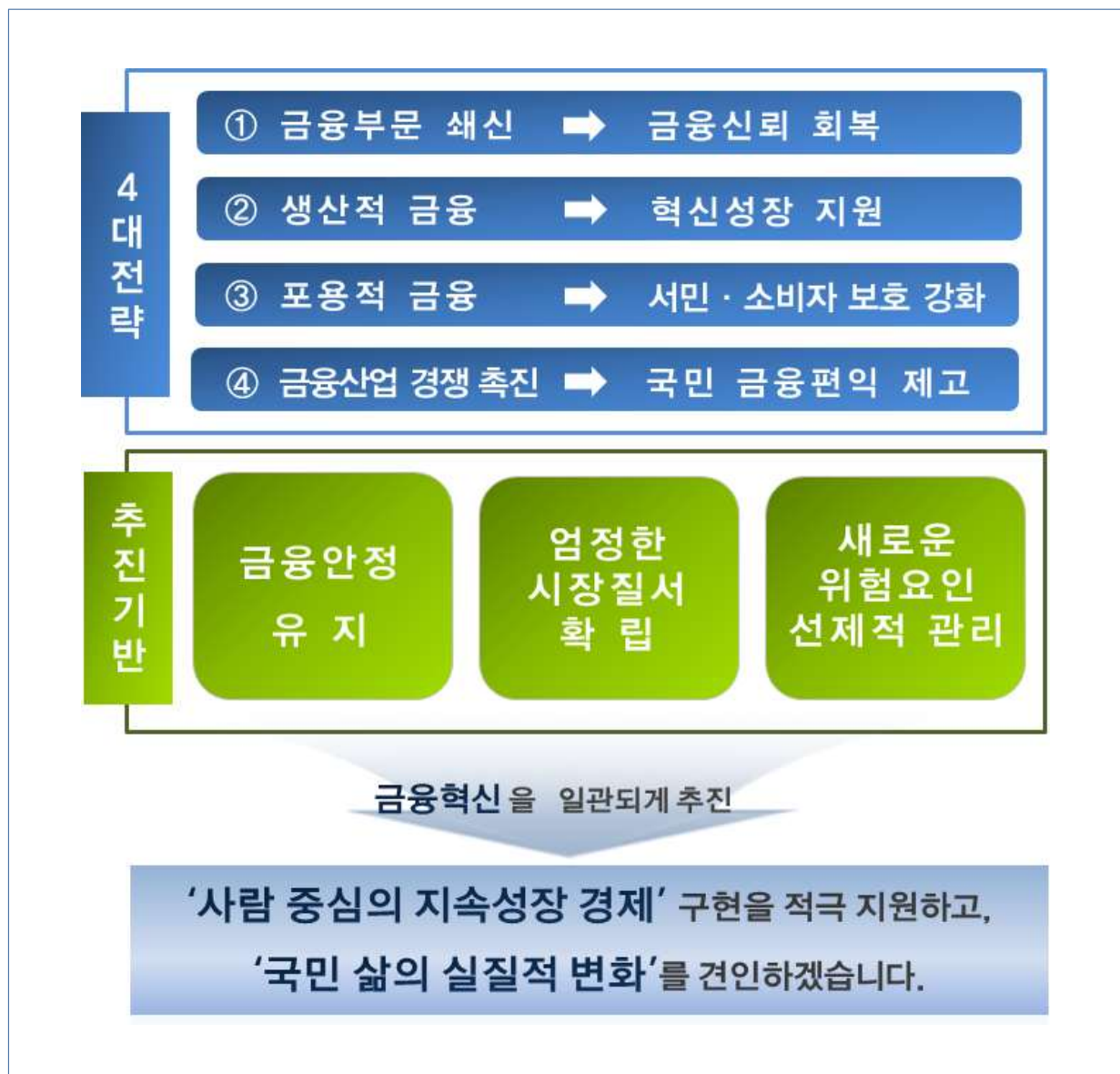
##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기반 하에 ‘금융혁신’ 추진 등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8개 핵심과제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하였음

\* ① 금융부문 쇄신, ② 생산적 금융, ③ 포용적 금융, ④ 금융산업 경쟁촉진

- ➡ 금융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

###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73개 세부과제 중 \*진하게 표시된 과제는 1.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 방향'에 포함된 과제, 음영 표시된 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제

		<18개 핵심과제>	<73개 세부과제>
4 대 전 략	금융부문 새 신	금융당국 혁신 금융산업 쇄신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이행 *직원행동강령 마련 *금융권 채용실태 점검·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회계투명성 제고
	생산적 금 융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혁신기업 창업 촉진 *역동적 성장 생태계 구축 *코스닥을 통한 도약 기반 강화 *실패기업 재기지원 강화 *금융업 자본규제 개편 *기술금융 활성화 *동산담보 활성화 *정책금융 역할 강화 중소조선사 지원 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지방 중소기업 지원 클라우드펀딩 이용 지원
	포용적 금 융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중금리대출 활성화 *연체방지 및 연체자 보호 신혼부부(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다자녀가구(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전세보증 이용자(신규주택 중도금 보증) 서민 취약차주(소액임차 특례보증) 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고정금리 전환) 고령층(주택연금) 청년·대학생(소액금융 체계 개편 등) *자영업자(카드 소액결제 수수료 인하 등) 노년층(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 장애인(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등) *금융채무 연체자(장기연체채권 정리)

		<18개 핵심과제>		<73개 세부과제>	
4 대 전 략	포용적 금 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 자산형성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이용 부담 경감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채권추심 규제 정비 보험 모집질서 개선
	금융산업 경 쟁 촉 진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산업내 혁신 도전자 출현 유도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강화	*ISA 혜택 강화 *공모펀드 신뢰 제고 *숨은자산 찾아주기 투자자문·일임 제도 개선 *사회적금융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추 진 기 반	금융산업 경 쟁 촉 진	핀테크 활성화	전통적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적 금융서비스 확대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은행업(금융여건 변화 대응, 바젤규제 도입 등) 보험업(혁신기술 발전 대응 등) 금융투자업(기업금융 관련 자금중개기능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업(지역·서민금융 적극 공급) 신용정보산업(CB사 정보처리 관련 업무 허용 등)
		금융안정 유지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리스크요인 점검·대응 강화 회사채시장 금리 변동성 완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상시 구조조정(*기업구조혁신펀드)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공적자금 관리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금융 전산보안 강화 금융지표 관리체계 마련 가상통화 대응 신종 자금세탁유형 대응 P2P대출 법제화

## 2 주요 추진과제

※ '18년 업무계획 과제 중 『금융혁신 추진방향(1.15)』에 발표된 과제 이외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과제 위주로 선정 → 혁신성장 관련(1~4번), 소득주도 성장 지원(5~12번),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관련(13~15번)

### 1. 핀테크 활성화

◇ 핀테크 창업 활성화(신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 촉진 등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마련(2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 규제혁신을 과감하게 추진

○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시장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2월 임시국회 발의 → '18년중 입법 목표)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을 통해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되 소비자 보호 및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문은 엄격히 규율

○ 법 제정·시행 전까지 현행법 하에서 실행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을 적극 활성화\*

\* ① (위탁테스트)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 하여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현재 17개 핀테크기업 신청)

② (지정대리인) 금융회사 위탁을 받아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근거 마련('18.上, 규정 마련)

○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등 규제 합리화 추진

\*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전제로 허용

□ 모바일 간편결제 등 혁신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

○ 핀테크지원센터 기능 확대\*, 네트워크 강화(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 기업-금융회사), 정책금융 2조원 지원('18~'19년) 등 지원체계 강화

\* 핀테크지원센터 기능을 상담 위주에서 교육·투자·해외진출 지원으로 확대

○ 새로운 핀테크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환경 조성

\* ① 모바일결제 → 모바일결제 업체들의 오프라인 결제 제공기준 마련

② 자율주행기술 보험상품 → 기초통계·첨단 안전장치 연구 지원(보험개발원 등)

③ 블록체인 인증 → 증권에 이어 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 2. 빅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정보 활용여건 마련

◇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정보보호 내실화 등 3대 전략 하에 안전한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추진

\* 빅데이터 활성화 등 세부방안('18.2월),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18.上)

### □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근거 마련 등 법·제도 정비 추진
- 공공부문은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가 부족한 창업·핀테크 업체를 지원하고, 대·중소형 금융회사간 정보격차도 해소

\* 신용정보원 등에 집적된 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등

- 금융정보 외에도 통신·온라인쇼핑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등을 고도화\*

\*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 기대

###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 신용정보산업(CB: Credit Bureau)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 허용 등 규제 합리화
-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 금융권역 간, 금융-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  
(금융산업·데이터산업을 지원하는 신용정보원의 인프라 기능을 강화)

### □ 정보보호 내실화

- 현행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합리화('알고하는 동의')하여 정보주체를 내실 있게 보호
- 정보주체가 데이터 활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결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요구·이의제기권 도입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독을 내실화하고 금융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

### 3. 금융부문 경쟁촉진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분기)으로 특화금융사 출현 유도 등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금융산업의 무술통공\*[戊戌通共])

\* 신해통공 : 정조 임금이 시전상인이 독점하던 상업활동을 다른 상인에게도 허용한 조치(1792년 신해년)

□ (적극적 진입정책) 적극적인 신규 진입정책 추진체계 마련

- 금융시장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신규 진입정책 결정

□ (진입장벽 낮추기) 자본금요건 등 진입규제 전반을 개선

- 온라인 보험사 활성화\*, 금융투자 분야 창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위해 자본금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현재 온라인보험사는 1개사에 불과

\*\* 예) 자본금요건 완화 : 1인 투자자문사 → 투자일임사 → 사모자산운용사

- 특화보험사·신탁회사 등 특화금융회사 출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인가단위 개편 등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

- 팻보험·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전문증권사\* 신설 추진

\*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 → 등록제로 전환, 자본금요건 완화(예: 30억원 → 15억원 이하) 등

- 치매·유연신탁 등 특화신탁사 설립 및 부동산신탁사 추가 설립 허용 추진

□ (인가과정 투명성 제고) 인가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하고,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인가 과정에서 법적쟁점 발생시 법제처 등과의 협업도 강화



## 4.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추진

◇ 클라우드펀딩 시장에 투자자와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 업종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추진('18.下)

### □ 투자자의 참여확대 유도(자본시장법·조특법 시행령 개정)

- 일반투자자의 총 투자한도를 500만원 → 1,000만원(법률상 최대)으로 확대(동일기업당 투자한도는 200만원→500만원)
-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투자한도를 2배 확대(총 투자한도를 1,000만원 → 2,000만원)
-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클라우드펀딩 투자대상 기업범위를 확대\*

\* (현행) 벤처기업·창업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 (확대)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 □ 기업의 클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제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그동안 이용이 제한되었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의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클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
- 클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이 추가자금 조달을 위해 소액공모를 하는 경우 자금 모집한도를 확대(10억원 → 20억원)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7년) 폐지, 참여비용 지원(예탁원) 및 전용 Seeding 펀드(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

### □ 클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및 지원 인프라 개선

- 중개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중개업자 규제는 합리화\*(자본시장법 개정사항)

\* 예) ① 임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  
②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의무 등 배제

- 종합포털사이트 '클라우드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

\* 모바일 전용사이트 구축, 검색기능 강화, 사회적기업 전용페이지 구축 등



## 5. 청년·대학생의 미래 대비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강화

◇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18.上)하여 금융  
애로 해소 및 취업 등 미래 대비를 적극 지원

□ (저리 대출) 청년·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저리자금 지원 확대

-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청년·대학생 햇살론  
추가 공급(약 600억원) 추진(‘18.1분기)
-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한도 확대, 지원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 병행 검토
-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채무를 연체한 청년·대학생이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간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에 대한 종합적 채무조정 추진(‘18.上, 교육부 협조)
-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예외  
(개선)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균등상환 외에도 체증식 상환\*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여 청년의 재기 가능성 제고

\* 예) 분할상환시 초기 2년중 10%를 상환하고 잔여기간에 90% 상환

□ (금융교육) 청년·대학생이 자신의 재무상황을 적절히 관리  
하고 대출 연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화

- 대학생 금융교육(실용금융 강좌 개설 등) 강화 및 일반 청년에  
특화된 금융교육 콘텐츠 마련·제공 추진
- 참여·혁신형 교육모델\* 도입·확산을 통해 교육 효과성 제고

\* 일방적인 교과내용 전달 대신 토론·문제풀이 등 참여를 통한 양방향 학습 진행

## 6. 청년병사의 전역 후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 지원

◇ 군인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추어 학자금·취업준비 등을 위한 종자돈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을 확대 개편('18.2분기)

※ 관계기관(국방부·기재부·은행연합회 등)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상품 개선 및 홍보방안 등 검토('18.2월)

□ 인상된 급여수준\*에 맞추어,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 적금상품 개선 검토

\* ['17년] 이병 16.3만원, 병장 21.6만원 → ['18년] 이병 30.6만원, 병장 40.6만원  
→ ['20년 목표] 이병 51.0만원, 병장 67.6만원

○ 현재 은행별 10~20만원\*으로 설정된 적금 월납입한도 상향

\* 현재 국방부 협약은행 상품인 '국군희망준비적금'의 월납입한도는 10만원, 여타 은행 병사 적금상품은 10~20만원 수준 / 이자율 약 5%대

- 향후 급여인상 수준 등과 연계하여, 월납입한도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검토

<예시>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20만원 납입시 만기에 약 435만원 수령  
→ 매월 40만원 납입시 만기에 약 873만원 수령

○ 병사들의 저축유인 제고 등을 위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 등도 검토

□ 병사들이 자기에 맞는 적금상품을 쉽게 찾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추진

\* 예) 병사들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군복무 중 1학기 학자금 모으기” 등 저축 프로그램 명확화, 다양한 적금상품 비교·공시 확대 등

## 7. 시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 은행권 협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 등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18.3월)

※ ATM 수수료 운영현황 점검 및 은행권 협의 추진(1~2월)

□ ATM 수수료 부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구조 및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

□ 저소득층의 ATM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 ATM 수수료 감면 범위 및 절차 등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

\* 예) (현행)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 (확대)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

※ [참고] 국내은행의 ATM 수수료 부담은 소득역진적 구조

○ 1분위 소득자의 수수료 부담건수가 2~5분위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으로 수수료 수입 중 1분위 소득자 비중이 57.4%에 달함\*

\* 5대 시중은행(국민, 하나, 우리, 신한, 농협)의 소득증빙자료 제출 차주 기준

○ 저소득층은 대체거래(모바일뱅킹 등) 활용률이 낮아 ATM 이용이 빈번하고,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파악

\* 낮은 소득으로 거래실적이 적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적고, 생활패턴상 영업마감 후 ATM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음

## 8. 잠자고 있는 돈을 주인에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등을 위해 숨은 금융자산(예금·보험 등) 조회서비스를 지속 개선·활성화

### [숨은 보험금 :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

□ 소비자가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보험금(7.4조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 개시('17.12월)

○ 조회시스템의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서버증설 완료\*('18.1.13일)

\* 동시 접속자가 단시간에 집중되는 경우에도 시스템 처리속도가 개선되어 소비자의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

※ 통합조회서비스 실시('17.12.18일) 이후, 보험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약 44.7만건/5,938억원 수준(18.1.12일 기준)

○ 『내보험 찾아줌(ZOOM)』서비스를 통해 약 197만명이 자신의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 등을 확인('18.1.21일 기준)

□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보다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를 연계하는 방안 마련('18.下)

### [숨은 예금 : 계좌 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http://www.Payinfo.or.kr)) ]

□ 계좌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숨은 은행예금\*을 통합조회하고 원하는 계좌로 이체(미사용 계좌 해지) 가능

\* 상호금융도 서비스개시('17.12.19~), 다만 예금 조회만 가능

※ 서비스 실시('16.12.9일) 이후, 1,176만명이 계좌를 조회하였으며, 찾아간 숨은 예금은 536.1억원('17년말 기준)

□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쉰 금융권으로 확대(은행·상호금융 → 우체국('18.上) 저축은행, 증권사('18.下)까지 확대)

## 9. 청년 등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 제2금융권 이용고객 등의 불이익 완화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발표('18.1.30일)

### □ 평가결과의 정확성·공정성 제고

○ 등급간 절벽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의 세분화를 위해 'CB등급제(1~10등급) → 점수제(1000점 만점)' 전환

○ 세금·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초년생·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불이익을 완화

\* 현재 비금융정보는 조세징수 차원에서 세금체납 등 부정적 정보 중심으로 활용중

○ 이용업권 외에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제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를 완화

### □ 평가체계의 투명성 강화

○ 평가지표 공개를 확대하여 등급 예측·관리 가능성을 제고

○ 평가결과에 대해 개별고객에 충분히 설명토록 하여 개인의 합리적 신용관리 지원

○ CB사가 개인신용평가 결과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

### □ 평가의 책임성 및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 구성 등 평가모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 구축

○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을 강화하는 등 평가 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

## 10.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18.7월)하고,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19.1월)

□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결제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지속

○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

\* 소액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높은 원가)해 카드수수료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높은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추진('18.7월)

\* (제도개선 방안)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뱅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 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소액결제 가맹점 약 10만개 대상으로, 가맹점당 약 200~300만원 수수료 인하 효과)

- 제도시행에 따른 가맹점별 효과를 시뮬레이션(여신협회)하고, 이후 해당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방안 마련

○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18.上)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19.1월 시행)

### <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 과제(예시) >

- ▶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카드수수료율 재조정
- ▶ PG방식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 ▶ 영세·중소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환급) 적용

## 11.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 확대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층 등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공급

□ (신혼부부)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증자리론’ 출시(‘18.3월)

\* 예)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경우 보증자리론 소득요건(현재 부부합산 7천만원)을 완화 적용 검토

□ (다자녀가구)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증자리론’ 출시(‘18.3월)

\* 예)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85㎡이하)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적용 검토

□ (전세보증 이용자)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18.上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3억원) 제한으로 전세보증과 중도금보증 동시 이용이 제약 → 인당 보증한도 확대 및 상품별 보증한도 도입 등 검토

□ (서민 취약차주) 성실상환 중\*인 신용회복중인 자 또는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임차 특례보증 도입(‘18.3월)

\* 예)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신용회복자,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서민금융 이용자 등

□ (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 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도입(‘18.5월, 5,000억원 규모)

\* (요건)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및 대출한도 3억원이하 등

□ (고령층) 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8.2분기)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적극 지원

\* 예) (현행) 해당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지급 → (개선)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하여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수익(임대료) 확보 가능



## 12.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보험상품 혁신

◇ 다양한 新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공백 해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추진

□ (다양한 新보험상품 개발 촉진) 혁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촉진

○ 치료에서 예방(cure → care)으로의 사회적 관심 변화에 맞추어 IT와 보험이 융합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출시 활성화('18.上)

-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 제공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시행('17.12월)

○ 첨단안전장치 연구·기초통계 분석 등을 지원(보험개발원 등)하여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개발 유도

- 자율주행기술 개발 관련 시험용 차량 보험상품, 첨단안전장치 장착시 사고 위험 감소를 반영한 할인특약 등 개발 지원

○ 자차 보험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정품 가격의 25%를 돌려주는 특별약관 마련('18.2월)

\* 품질인증 대체부품 : 순정품(OEM부품)은 아니나, 자동차부품 성능 품질인증 기관이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여 수리에 사용하는 부품(자동차관리법 §30-5)

□ (사회안전망 강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하여 보험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기능을 한층 강화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여,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 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18.4월)

○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장치\*를 마련하여 생애 주기에 걸쳐 중단없는 보장을 제공('18.上)

※ 단체 실손 : 기업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실손 상품  
노후 실손 : 자기부담이 높으나 보험료가 20~30% 저렴한 고령층(50~75세) 대상 상품

### 13.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 新DTI, DSR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가속화 지속

□ 新DTI·DSR을 금년중 차질없이 도입·정착시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 강화

○ 주담대 취급시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부채에 반영하고, 소득산정의 정확성을 개선한 新DTI 시행('18.1.31일)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 도입(은행권, '18.下)

\*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향후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 대출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 지속

○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18.下)

\*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증빙소득 우선), 분할상환 관행정책(신규 주담대 취급시 비거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Stress DTI 적용

※ 은행, 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既 시행중

○ 은행·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중 확대\*

\* (은행) '17년 45% → '18년 47.5%, (보험) '17년 30% → '18년 35%

\* '18년 분할상환 목표는 '17년과 동일한 목표비중 유지 : 은행(55%), 보험(50%)

○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활성화 방안\* 마련('18.上)

\* 예) 적격대출 양수요건에 금융회사별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커버드본드 취급 실적 반영, 커버드본드 발행절차 개선 등

## 14.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제도 정비

◇ 채권자와 개인채무자 간에 대등한 추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18.上)

□ 금융회사·추심업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을 제한하고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

○ 부실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 행정지도\*로 규율중인 추심 관련 주요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  
하기 위해 법제화 등을 추진

\* 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5.12월 금융권, '16.11월 대부업자)  
②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17.4월~)

○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 및 대출채권 매각 단계별  
절차 규제\* 등 법제화 추진('18년중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개정)

\* 매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매입처 실사, 채권 서류정보의 충실한  
제공, 매입처 사후관리 등

□ 개인채무자 스스로 불법·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

○ 채무자의 권리보호 능력 제고를 위해 채무정보 제공을 확대\*  
하고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신용정보원, '17.4월~)을 통해 일부 채무 정보 제공중

□ 같은 추심업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채권  
추심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제체계 마련

\* 예) 채권추심회사(자본금 30억), 매입채권추심업자(자기자본 3억) 등

## 15. 공시 강화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현재 자율공시중인 지배구조 공시를 대형사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18.上 방안 마련)

□ 현재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 제도 도입하여 운영중('17.3월~)

○ '17년 9월말까지 총 70개사\*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

\*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748개사)의 9.36% 수준('17.9월말 기준)이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사(39개)를 제외한 비금융 공시 기업은 31개사

□ 기업 경영투명성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18.3분기)

○ '18년 상반기중 유관기관 및 상장사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19년 상반기부터 시행 추진

\*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TF(민관합동) 운영(거래소, 기업지배구조원 등)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및 미준수시 그 사유를 공시(Comply or Explain)

\* 영국, 일본, 홍콩 등도 Comply or Explain 방식의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 공시품질 제고를 위한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병행

- 도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시 조치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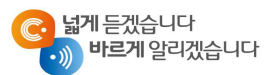
※ 적극적 주주권 행사유도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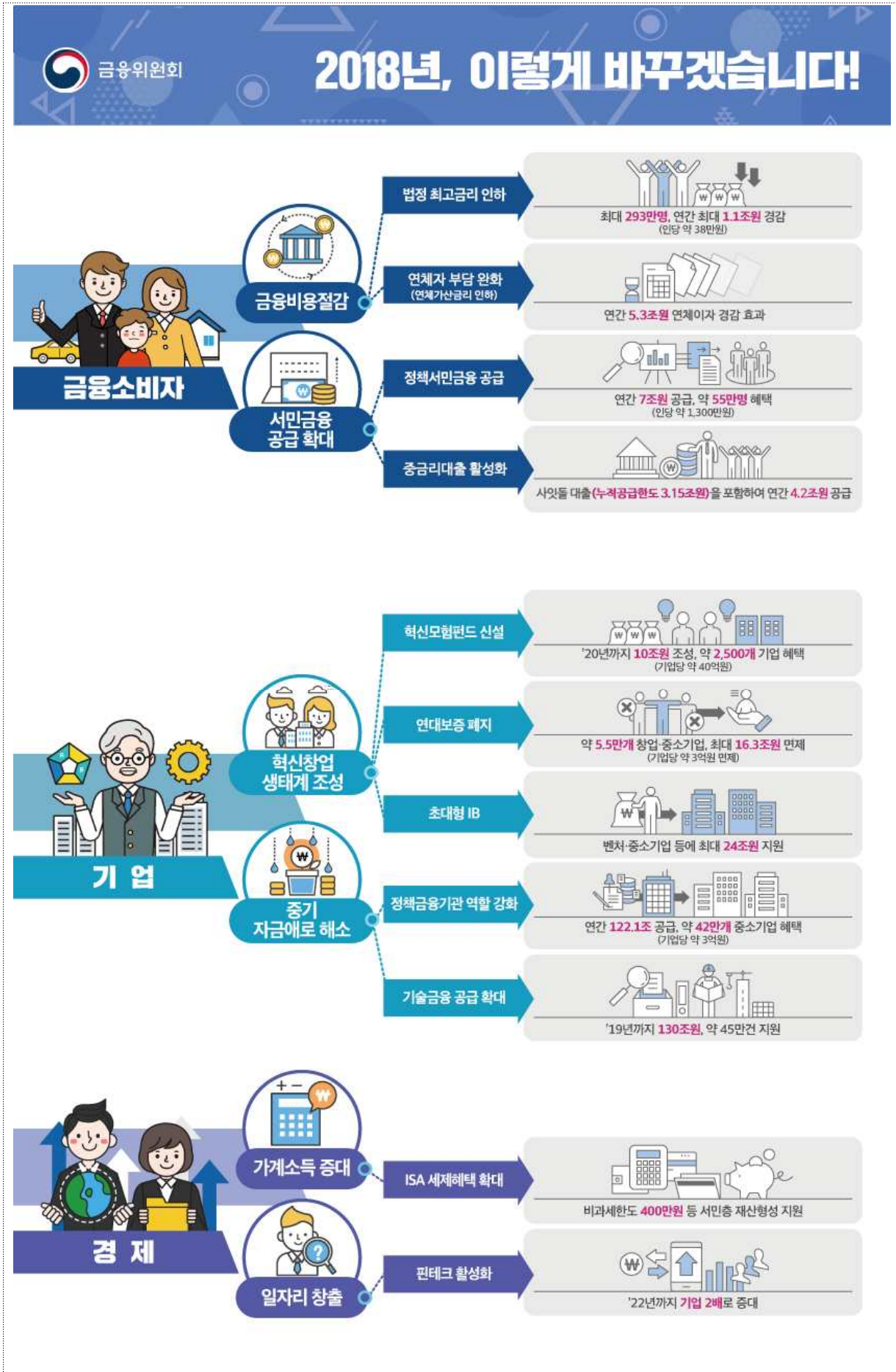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새도우보팅 폐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과 제	책임자(☎ 2100-)	담당자(☎ 2100-)
1	핀테크 활성화	전자금융과장 주홍민(2970)	송용민 사무관(2971)
2	빅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정보 활용여건 마련	신용정보팀장 이한진(2620)	오유정·김기훈 사무관(2621,2625)
3	금융부문 경쟁촉진	은행과장 박 광(2950)	박진애 사무관(2953)
4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자산운용과장 김기한(2660)	김영대 사무관(2672)
5	청년·대학생의 미래 대비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강화	중소금융과장 신진창(2990)	최치연 사무관(2991)
6	청년병사의 전역 후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 지원	은행과장 박 광(2950)	김성진 사무관(2951)
7	서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은행과장 박 광(2950)	송현지 사무관(2954)
8	잠자고 있는 돈을 주인에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보험과장 손주형(2960)	태현수 사무관(2962)
9	청년 등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신용정보팀장 이한진(2620)	오유정 사무관(2621)
10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중소금융과장 신진창(2990)	양병권 사무관(2992)
11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 확대	금융정책과장 이형주(2830)	이은진 사무관(2836)
12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상품 혁신	보험과장 손주형(2960)	현지은 사무관(2964)
13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정책과장 이형주(2830)	윤덕기 사무관(2835)
14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제도 정비	신용정보팀장 이한진(2620)	주민석 사무관(2623)
15	공시 강화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시장과장 손영채(2680)	김미정 사무관(2681)